

## 1977년 체코슬로바키아 77현장에 대한 한국의 인식: 한국언론의 보도를 중심으로

양준석 ■ 국민대학교\*

### 〈국문요약〉

이 연구는 1977년 체코슬로바키아 77현장의 전개과정과 이에 대한 한국의 인식을 언론자료에 기초해 분석한다. 1977년 1월 공개된 77현장은 비정치성과 인권에 방점을 둔 체코슬로바키아인들의 자유화 운동이었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체코슬로바키아정부의 현장 관련자들에 대한 인권 탄압 과정을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보도했다. 한국언론은 동유럽 인권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응에도 주목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77현장을 지지하고, “새로운 프라하의 봄”이라 평가했으며, 미국 역시 동유럽 인권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깨고, 인간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침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국언론은 77현장 사건 이후에도 관련보도를 지속했고, 1989년 벨벳혁명까지 77현장에서 이어져온 체코슬로바키아의 자유화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한국언론은 77현장 발생 배경에 대해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저항하는 공산 세력 내부의 갈등을 원인으로 짚었다. 한국에서의 77현장 관련 보도가 다층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반면, 북한에서는 1968년 프라하의 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도했던 것과 달리 1970년대 후반 경제침체가 가속화되는 시기 77현장 관련 보도는 전무했다.

\*주제어: 한-유럽관계사, 77현장, 체코슬로바키아, 동유럽, 공산주의

## I. 서 론

1968년 프라하의 봄이 무산되고 이른바 정상화시기에 공산독재체제에 반대하는 개인과 그룹이 있었지만 활동은 미약했다. 하지만 1977년 1월 다양한 계층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E-mail: chirira@hanmail.net)

을 대표하는 체코슬로바키아 인사들이 모여 유엔헌장, 1975년 헬싱키최종동의정서(Helsinki Final Act), 체코슬로바키아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체코슬로바키아정부가 제대로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77헌장(체코어: Charta 77, 영어: Charter 77) 그룹을 출범시켰다. 243명의 서명자 중 1969년 프라하의 봄 때에 공산당 중앙 위원회 서기였던 물리나쉬(Zdeněk Mlynář),<sup>1)</sup> 2000어 선언의 기초자였던 바츨리크(Ludvík Vaculík), 사상가인 파토츠키(Jan Patočka),<sup>2)</sup> 1968년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하예크(Jiří Hájek),<sup>3)</sup> 1989년의 체코슬로바키아 혁명을 주도하고 대통령이 되는 극작가 하벨(Václav Havel) 등은 이 그룹을 사실상 주도한 대변인들이었다. 이 그룹에는 반체제그룹의 대표자들이 모여있었고, 개별적 의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권리를 위한 관용과 존중의 정신을 기반하고 있었다. 헌장의 발기자들은 공산주의 체제의 해체시까지 비공식적인 시민단체의 기틀을 제공했다(Čornej & Pokorný 2015, 78-79).

지식인 중심의 소규모 반체제운동에 불과했던 77헌장의 흐름은 1968년 프라하의 봄을 계승하여, 1989년의 벨벳혁명으로 이어지는 체코슬로바키아와 동구권의 인권과 반체제인사의 분수령이었다. 77헌장의 주요 서명자들은 1989년 체코슬로바키아 자유화에서 반체제인사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특히 하벨은 공산정권 퇴진 후 체코슬로바키아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Tamkin 2020). 냉전체제 붕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움직임이었던 벨벳혁명의 추동은 77헌장으로부터 촉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헌장의 세계사적 의미를 부

- 
- 1) 물리나쉬는 1950년대 모스크바에서 법학을 전공하던 시기에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와 교우관계를 맺었고, 냉전기 관계를 유지했기에 서구의 지속적 주목을 받던 인물이었다. 프라하의 봄 시기 공산당의 독재를 강화하는 헌법 조항을 완화하는 정부 측 개혁정책을 주도하기도 했으며, 77헌장 이후 오스트리아에 망명하여 오스트리아 국제정치연구소(Austri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tics)에서 근무하면서 체코슬로바키아문제의 국제적 관심을 도출하려 노력한 인물이었다(*The New York Times*, 20 April 1997).
  - 2) 77헌장에 있어서 파토츠키를 주목한 이유는 반체제인사 운동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고, 그의 저작을 통해 ‘진실의 삶’에 관한 몇 가지 근본적인 반체제저작을 저술했기 때문이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지적 역사에서 중요한 요소는 안 후스, 코멘스키, 마사릭(Tomáš Garrigue Masaryk), 파토츠키로 이어지는 도덕적이고 살아있는 원칙으로서의 진리를 통해 내려오는 오랜 전통이었다. 1977년 파토츠키는 이러한 원칙을 기초로 77헌장을 제정했다. 하벨 역시 개인 및 정치 생활에서 도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파토츠키의 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Matula 2011, 295-296).
  - 3) 1962-1965년 체코슬로바키아 유엔대표, 1965-68년 사이 교육부장관을 역임했던 그는 바르샤바조약기구 병력의 체코슬로바키아 점령 당시 유엔에서 ‘점령’이라는 표현을 통해 소련과 주변 국가들이 행한 점령의 부당함을 고발했고 이로 인해 1970년 공산당으로부터 제명되었다. 이후 77헌장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여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할 수 있다.

77현장 주도자들이 부여했던 현장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벨은 “우리는 이 세계를 보다 나은 장소로 만들 것인가 고민했고,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런 노력은 77현장이라고 불렀던 하나의 서언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 현장은 자유와 부정의, 인권, 민주주의와 정치적 다원주의, 시장경제 이외에도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담고 있었다”(바츨라프 하벨 2016, 47)라고 했다. 77현장의 대변인 하예크는 77현장은 국가가 약속한 법률과 규정의 시행 여부를 조사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이익단체며, “현장의 본질은 완전하고 적극적인 시민의식에 대한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철학자이자 77현장 대변인 헤이다넥(Ladislav Hejdiánek)<sup>4)</sup>은 “77현장의 주요 목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상황을 조망하는 것”이라 했다. 77현장에 대한 정부 조사 도중 사망한 파토츠키는 “우리의 삶에서 인권, 정치 및 사생활의 도덕성을 지향해야 하며, 현장은 위협이 있더라도 그러한 활동을 우리 자신과 해외에 상기시키려는 노력”이라는 정치적 유언을 남겼다(Prečan 1978). 77현장의 주요 관계자들은 그들이 자신의 개별 이익 또는 그들이 속한 사회, 국가의 특정한 이익과 목적이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지향을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의 평가도 주로 운동의 순수성, 현장 참여에 따른 사회적 고립, 반공산독재의 가치 등을 주요하게 다뤘다. 체코 정치인 얀다(Jakub Janda)는 77현장 그룹이 처음에는 인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정치 생활의 ‘발판’인 만큼 정치적 집단으로 출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Tamkin 2017). 또한 77현장은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으며, 참가자들의 인간의 기본 권리에 대한 정당한 의사를 표출했으나, 현장의 서명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사회에서 억압받고 고립되어야 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다. 사실 1970년대 사회의 대다수는 “권위에 도전하는 시위에 참가하여 관심을 끌고 싶지 않다”라고 인식했고, 현장 서명자들을 환영하지 않았다(Tamkin 2017). 마지막으로 77현장의 반공적 의제는 분명했다. 참가자들은 프라하의 봄이 제시한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사상”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공산정권의 물리적 탄압과 직접적인 전체주의 정책을 거부했다(Pesik 1998, 17).

이러한 77현장이 갖는 세계사적, 유럽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4) 헤이다넥은 철학자이자 1940년대 말부터 체코슬로바키아의 YMCA 산하 에큐메니컬 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1960년대까지 에큐메니컬 운동을 주도하고, 인권문제에 깊은 관심을 유지하는 인물이었다([https://www.pametnaroda.cz/cs/hejdanek-ladislav-1927?locale=ru\\_RU](https://www.pametnaroda.cz/cs/hejdanek-ladislav-1927?locale=ru_RU). 2022/07/15 검색).

소수의 연구만 진행되었을 뿐이다. 기존 연구는 77현장의 한계를 지적하며, 77현장은 소수 지식인 중심으로 인권과 같은 비정치적 분야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민주화의 기반이 되지는 못했고, 1980년대 후반까지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개혁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김정현 외 2017, 55). 이와 대조적으로 김신규(2002)는 77현장이 대공산정권 투쟁과 1989년 공산정권 붕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적 전통과 시민 전통을 분석한다. 또한 77현장이 조직적 형태의 반체제 활동이 미약했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독자적인 시민사회가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고, 시민들의 민주적 요구를 표출할 수 있는 통로를 제시하는 등 민주화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한다(김신규 2020). 한국에서 출간된 체코학자 마툴라(Jozef Matula)<sup>5)</sup>의 연구는 냉전기 전체주의에 반대하는 체코슬로바키아 지식인들의 자유, 존엄, 도덕적 가치를 다루고 있으며, 77현장이 자유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Matula 2011).

1977년 당시에도 한국인들은 동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를 향한 투쟁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있었다. 이 연구는 사건 당시 생산된 자료를 통한 본격적 연구가 부재함에 주목하며, 77현장의 전개과정과 1977년 한국의 체코슬로바키아 자유화 운동에 대한 인식을 1차 자료에 기초해 분석한다. 1970년대 동유럽에 대한 관심과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 언론의 신속하고 세밀한 보도는 그 자체로서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77현장에 대한 한국과 북한의 보도방식을 통해 체코슬로바키아의 자유를 향한 움직임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지를 파악한다. 77현장에 대한 한국의 보도방식이 국제적 흐름과 비교해 어느 정도의 정확성 또는 유의미한 보도가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이 연구는 조지워싱턴대학(George Washington University)의 The National Security Archive에서 공개하고 있는 77현장 관련 CIA 보고, 체코슬로바키아 비밀경찰(체코어: StB, Státní bezpečnost, 영어: State Security) 문건들을 활용한다.

냉전기 동유럽, 특히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자유화 운동은 세계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1968년 프라하의 봄과 1989년 벨벳혁명은 냉전기 동유럽의 흐름을 전환하는 중요한 세기적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1968년과 1989년을 연결하는 1977년 77현장은 두 사건과 비교해 한국에서 정당한 자리매김을 하

5) 그는 『동유럽연구』 제28권에 실린 그의 논문 서두에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정권기 정치범으로 12년 동안 복역한 할머니에게 이 연구를 바친다고 기록했다.

지 못했다. 반정치, 탈정치, 그리고 탈진실 등이 뒤섞여, ‘자유’와 ‘독재’의 본래 의미가 불분명해지고 있는 현재에서 77헌장은 전체주의에 대한 항거, 자유를 향한 투쟁 기록이 생생히 나타나는 사례이다. 77헌장 사례를 통해 당연히 누리고 있는 자유의 획득 역사를 재구성하는 기회를 가질 뿐 아니라, 일상을 침식하여 자유를 제한한 후기전체주의의 속성을 파악하고, 경계하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 II. 77헌장의 배경과 전개

1968년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주창하며 진행된 프라하의 봄은 같은 해 8월 소련을 비롯한 바르샤바조약기구 병력의 침공으로 실패했으며, 체코슬로바키아는 프라하의 봄 이전의 강력한 통제사회로 되돌리는 정상화정책을 추구했다. 시민들은 소수 엘리트의 전체주의 통치정책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더 나은 기회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동적인 수용자세를 취했다. 1969년부터 시작된 정상화 프로그램은 모든 형태의 반정부 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졌고, 조직적인 반정부 운동은 1970년대 후반까지 형성될 수 없었다(Pesik 1998, 7). 1972년 1월 반체제운동에 대한 전면적 경찰 수색과 정치체판 이후 정치체제에 반대 의견은 지하출판(samizdat)으로 표출되었다. 반체제그룹은 1968년 개혁을 옹호했으며, 그들의 시위는 1975년까지 계속됐다. 소련에 의해 축출된 1968년 당시 공산당 서기장 둠체크(Alexander Dubček)의 공산정권 비판 편지 출판 후, 반체제인사들은 정권과 직접 대결을 피하며 더 활발히 활동했다(Prečan 1978). 그러나 후사크(Gustáv Husák)정권은 위로부터의 정통성과 경제이행 강화라는 두 원칙으로 반체제단체의 활동을 제어했다. 그럼에도 정상화 초기 성장추세의 경제성장은 1970년대 중반부터 악화되었고, 이는 정통성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김신규 2002, 8).

77헌장 발표를 위한 반정부 계획은 체코슬로바키아정부가 헬싱키국제조약에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경제조약을 비준하며 촉발되었다.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가 포함된 이 조약은 1975년 11월 11일 체코슬로바키아 정부에 의해 비준, 1976년 3월 23일 공식적으로 체코슬로바키아 헌법에 포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시민권과 인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저명한 반체제인사, 젊은 시민운동가, 전 공산주의자를 중심으로 반체제그룹은 형성됐다(Pesik 1998, 7-8). 헬싱키국제조약 이후 데탕트가 체코슬로바키아 내부의 자유화

를 자동적으로 가져오지 않았다고 판단한 반체제인사들은 정권에 대한 권리 보장을 촉구할 충분한 영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를 시작했다(Prečan 1978).

또한 반체제그룹이 결성되는 내부 동력으로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1976년 *The Plastic People of the Universe*란 록그룹 관련자들의 투옥으로 시작됐다. 14명의 청년이 재판받을 때 어른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언더그라운드 그룹의 음악이 위선과 소비주의에 대한 실존주의적 반대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은 것은 결국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 배경과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연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존 연구는 이 연대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의하는 젊은이들의 기본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두었다(Prečan 1978). 하벨 역시 록그룹에 대한 재판에 대해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진실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에, 사람들의 삶에 가해진 충격이 바로 그 사건”(바츨라프 하벨 1992, 58)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1976년 하반기 헬싱키국제조약에 대한 체코슬로바키아정부의 준수를 감독하고 인권과 시민권을 옹호할 그룹이 설립되었다. 당시 현장 설립의 핵심 인물은 물리나쉬, 헤이다네, 역사가였던 하예크(Miloš Hájek), 파토츠키, 하벨, 작가 코호트(Pavel Kohout)였고, 이 그룹은 발표 내용을 77현장으로 명칭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견해는 정치적 다원주의에 기반했기 때문에 77현장이 어떤 종류의 회원 자격이나 정치적 지향도 갖지 않을 것이라고 확정했다(Pesik 1998, 8-9). 1977년 1월 77현장의 서명자는 243명이었지만, 6월까지 약 700명으로 확장됐다. 그리고 현장에 서명한 다수는 프라하의 봄 동안의 활동으로 인해 공산정부에 의해 반체제인사로 낙인찍힌 사람들이었다.

서명자 그룹 중 전 공산주의 그룹은 주로 세 그룹으로 나뉘고 있었는데, 이러한 특징이 77현장 서명자들의 다양성을 나타내주는 주요 사례였다. 전 공산주의 그룹은 첫째, 하예크(Miloš Hájek) 중심으로 유럽공산주의자. 둘째, 울(Petr Uhl) 중심의 혁명적 공산주의자들의 소그룹인 트로츠키주의자, 셋째, 개혁공산주의자그룹으로서 이들은 공산주의 사상에서 가장 분리된 그룹이었다. 77현장의 처음 243 서명자 중 140명은 전 공산주의자였다. 전 공산주의자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그룹은 소련의 공산주의를 비판하며 조직된 유럽공산주의자였다(Pesik 1998, 13-14). 두 번째 그룹인 트로츠키주의자들은 급진성을 보였으나, 영향력은 미미했다. 공산주의자들의 강한 좌파적 성향은 우익 지향적 성향을 견지한 77현장의 젊은 세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Pesik 1998, 15). 세 번째 개혁공산주의 그룹은 공산당과의 어떤 종류의 협력도 거부했고, 77현장 비공산주의자 우익 지향을 지지했다. 이러한 공산주의 그룹 내에 서로 다른 의견

과 현장 77현장의 초당파적 성격, 그리고 인권과 시민의 권리에 대한 지향은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졌다(Pesik 1998, 16).

이러한 내부적 사정과 참여 세력의 비동질성을 고려할 때 77현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권과 인류애에 기초한 비정치성을 추구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하벨은 “77현장의 의도는 어떤 계획이나 이념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며, 정치적 힘으로 정권과 경쟁하려 한 적도 없다 … 무관심에 의해 분열된 사회에 단 한사람의 자유에 가해진 공격이 우리 모두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기 시작”라고 했으며, 현장은 “작가와 구정치인, 당적없는 공산주의자, 구교도와 신교도, 지식인과 노동자, 대학생과 청년연합대표들이 가담했다. 강령은 없었다. 무엇보다도 윤리적인 동기애로 협력했다”(바츨라프 하벨 1992, 57-59)라며 77현장 운동이 갖는 비정치성과 순수한 인권을 향한 동기에 운동의 방침을 두었다. 따라서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란 현장원칙은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체코슬로바키아정권은 현장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었다. 당시 체코슬로바키아 내무장관에 따르면, 실제로 “77현장은 너무 교활하게 작성되어 열 명 중 한 명만이 그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할 정도였다(Prečan 1978).

77현장은 이데올로기 차이를 극복하려 했고, 대중들의 권리 침해사례를 기록하고 비판했으며, 정부가 비준한 국제규약의 준수를 요구하면서,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폭로했다. 77현장의 영향력을 수량화하여 측정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으며 정권의 한계성을 폭로했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창출에 기여했다(김신규 2002, 6)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77현장은 동유럽 공산정권만을 비판의 대상으로 지적하지 않았다. 77현장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공공선을 추구하고 동유럽과 서유럽 모두에서 시민 중심의 인권 보장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특히 현장의 대변인 파토츠키는 동유럽의 자유 뿐만 아니라 서구 사상의 기술 만능주의적 경향을 비판하며(Matula 2011, 295), 서구 중심의 문명적 한계 역시 지적하고 있었다.

### III. 1977년 초 한국언론의 보도

#### 1. 77현장 공개 직후 체코슬로바키아정부의 탄압

1970년대 유럽은 데탕트에 따라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섰다. 동유럽의 비밀스

럽고, 압박적인 공산체제가 균열하고 있는 것이었다. 1975년 35개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헬싱키에서 헬싱키최종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최종 평화협약이며, 유럽의 데탕트에 있어서 최대 성과였고, 동유럽 확장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위한 소련의 최대치였다. 유럽의 안보·경제협력과 과학 협력에 대한 조항과 함께 최종의정서는 인권에 대한 지침을 수립했다. 이러한 지침은 이주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했고, 소련과 동유럽 공산국들은 서구, 인권옹호자, 반체제그룹에 의해 감시받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기도 했다 (Judge & Langoon 2018, 258). 이 시기 미국의 소련과 동유럽 정책도 변화했다. 데탕트가 진행되며 소련은 미국의 닉슨(Richard Nixon)과 포드(Gerald Ford) 대통령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고, 미국의 지도자들은 반공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실용주의적 노선에서 소련과 외교관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카터(Jimmy Carter)는 1976년 대통령 당선 후 독립선언부터 미국 외교정책의 근간은 ‘인권’이라 주장하며, 대유럽, 대소련 외교에 변화를 예고했다(Judge & Langoon 2018, 265-266).

이러한 데탕트 이후의 국제적 변화와 함께 한국도 1972년 유신체제 이후 여러 도전적 상황을 맞이했다. 국가의 권위주의적 정책에 학생, 지식인, 종교인이 반대에 나섰으며, 유신체제 철폐와 민주주의 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닉슨과 포드 정부는 한국의 인권문제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중국 관계 개선과 베트남전쟁 종결 문제에 비해 한국의 우선순위는 낮았고, 또한 한국의 지속적 경제성장, 박정희 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반공노선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977년 1월 들어선 카터행정부는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와 인권상황 개선에 큰 관심을 나타냈고, 한국의 인권사항 개선 문제를 두고 한미 간 마찰을 빚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었다(그렉 브라진스키 2011, 376-385).

데탕트 이후 경제적 안정과 민주주의의 균형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있던 한국에서 동유럽 인권문제의 국제적 노출이 발생하며 1977년 1월 1일 공개된 77현장에 대한 첫 기사는 1월 8일 등장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반체제지식인 240명이 소련 강점 하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하는 지하선언문 77현장을 발표했으며, 4명의 반체제인사가 체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언론은 77현장은 유엔 인권선언문과 75년도 헬싱키 유럽안보회의선언문에 새겨진 인권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문서상으로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sup>6)</sup> 77현장에 명시된 지향목표는 분명하게 한국에 전달되었다.

6) 체코슬로바키아정부가 최종서명하여 헌법에 포함한 유럽 안보협력회의 최종 문서중 인



1976년 10월 13일 체코슬로바키아법률집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학술,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 수록되었다. 이 두 조약은 75년 헬싱키 회의에서 확인되었다. 그 후 우리나라 시민은 이러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국가는 그 권리를 책임지게 되었다. 그러나 두 조약의 공표는 유감스럽게도 종이쪽지로 밖에 통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인식시켰다. 시민들은 공적 견해가 그들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본래의 직업을 갖지 못하고, 공포로부터의 해방을 거절당하고 있다 … 공동책임의 의식, 시민참가에 관한 신념, 공통의 요구 및 새로운 효과적 방법을 제시하려는 의사가 이 77현장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77현장은 정치적 기관이 아니다. 규약도 없고, 상설기관도 없다. 정치적, 사회적 개혁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실현에 관해 정치, 국가권력과의 건설적 대화의 길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한다. 77현장이란 상징적인 명칭은 1977년 초에 설립되고, 정치법의 권리의 해에 선언되고, 또 올해에 헬싱키선언의 의무이행이 검토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뜻을 지니고 있다. 77현장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모든 국민이 자유스러운 인간으로 일하고 또 생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프라하 1977년 1월 1일(『朝鮮日報』 1977/02/02c).

한국언론은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수 십만 시민이 공식노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이유로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일할 권리를 거부당하고 자신을 변명할 기회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일종의 분리정책의 희생물”이라고 언급되었다. 또한 체코슬로바키아의 예술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거부당하고 사상과 비판은 검열과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77현장은 다양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조국과 세계의 민권 및 인권 존중을 위해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헌신하겠다는 의지로 규합된 자유롭고 비공식적이며 개방된 연합”이라고 말했다(『東亞日報』 1977/01/08). 이 현장에는 하벨, 바츨리크가 포함되었으며, 1968년 프라하의 봄 시기 당시 외교부 장관 하예크 교수도 있었다. 하예크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 선언문에는 전공산당원, 비공산당원, 종교계 인사, 작가, 예술인 등 광범위한 계층의 인사들이 서명했다”고 밝혔다(『東亞日報』 1977/01/08). 첫 보

---

적교류 및 정보에 관한 조항은 역시 한국의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참가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제6원칙: 참가국은 인권 사상 양심 종교 신념 등 기본적 자유를 존중한다. - ‘인도 및 기타 분야에 있어서 협력’ <인적 접촉>: 참가국은 인간, 기관, 조직에 의한 자유로운 이동과 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 가족재회를 위한 비자는 출생국이나 행선지에 관계없이 처리한다. 2) 다른 참가국의 시민과 결혼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출국 신청은 인도적 배려를 한다. 3) 여행의, 제한을 완화한다. 참가국은 모든 정보를 보다 자유롭고 폭넓게 배포하고, 참가국의 저널리스트가 다른 참가국에서 활동할 때의 조건을 개선한다(『朝鮮日報』 1977/02/02c).

도입에도 불구하고, 77헌장의 세부적 내용과 헌장의 공개 이유, 참여 구성원, 향후 조직의 방향이 종합되어 비정치성을 강조하는 운동의 성격까지 전달하는 기사였다.

1977년 1월 6일 체코슬로바키아 정부경찰 책임자인 소우드니(Jiří Soudný)의 결정문에 따르면, 체코슬로바키아 비밀경찰(ŠtB)은 77헌장이 공화국의 사회주의 사회 및 국가 시스템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화국의 사회주의적 사회제도와 국가제도에 대한 명백한 공격”임에 따라, 형법 98조 “전복” 범죄로 기소된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형사 절차가 시작됐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 공격은 사회주의 시스템을 향한 “조잡한 공격”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으며, “적대적 요소”가 “다른 반사회주의적 요소를 압도하고 있다”라고 형사 절차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다(Depart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Corps, City of Prague 1977).

1977년 1월 9일 언론보도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수십만 시민이 공식노선과 다른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로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일할 권리를 거부당하고 자신을 변명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朝鮮日報』 1977/01/09). 1월 10일부터 한국언론은 체코슬로바키아정부의 본격적인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탄압보도에 중점을 두었다. 1월 8일 체코슬로바키아 당국은 반체제지식인들을 “서방세계의 냉전 전사들에 의해 책동 받은 새로운 외인부대”라고 지칭하며 비난했고, 국내외의 체코슬로바키아 비판자들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기관지인 루데 프라보(Rudé Právo)는 서구에 대한 공격적인 비난 논설을 통해 반체제지식인들은 “조국의 인민과 모든 유대를 단절할 사람들로써 정치 및 사회적 난파선”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상호신뢰관계를 저해하고 데탕트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인사인 하벨이 다른 3명의 관련자와 함께 체포되어 심문을 받은 후 이날 석방되었음이 보도되었다(『東亞日報』 1977/01/10) 한국언론은 체코슬로바키아 현지와 불과 하루 또는 이틀 정도의 시간차로 사건 관련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었다.

1977년 1월 11일 체코슬로바키아 경찰은 형법 112조에 따라 체코슬로바키아 시민에 의한 공화국의 이익을 해한 범죄에 대해 형사 소송을 시작했다. 소송 내용은 반체제인사들이 1976년 12월부터 1월에 이르기까지 외국 언론의 도움을 받아 체코슬로바키아 상황에 대해 사실이 아닌 보도를 해외에 유포함으로써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부분에 대한 것이었다. 체코슬로바키아 비밀경찰은 “공화국 상황에 대한 거짓 보고서”를 해외에 유포함으로써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해외의 이익과 평판(형법 112조)을 손상시킨 혐의로 현장 서명자들을 기소하려 하

고 있었다(Department of Investigation, State Security Forces(StB) 1977). 이 시기 77현장 서명자들과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제재가 본격화 되고 있었다.

1977년 1월 12일 한국언론은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체코슬로바키아정부의 탄압과정을 연이어 보도했다. 경찰이 하벨 등 12명 인사에게 경찰 출두 소환령을 내리고, 반체제인사들의 자택 전화선을 단절했으며, 소환령을 어긴 인사들의 아파트의 문을 부수고 가택을 조사하는 등 자유화 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東亞日報』(1977/01/12)). 또한 1월 17일 보도에서는 경찰은 현장의 서명자 가운데 한 사람인 언론인 레데레르(Jiří Lederer)와 하벨을 또 다시 체포하고 구속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현장의 서명자들은 당국이 불명확한 죄목으로 반체제운동가들을 탄압하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체코슬로바키아정부의 반체제인사에 대한 압박정책은 기존 대응방식에서 전환된 것이었다. 체코슬로바키아정부는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이념적 공격 방식에서 직접적으로 탄압하는 강경책을 쓰기 시작했다(『東亞日報』1977/01/17).

체코슬로바키아 자유화의 상징인 하벨의 재소환과 구속은 사태의 심각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서구 언론은 직접 하벨의 부인과 접촉했고, 하벨의 구속은 그의 아내 하브로바(Olga Havlová)의 15일 발표로 확인된 내용이었다. 하브로바는 로이터통신과 통화에서 “밤새 하벨이 돌아오지 않아 경찰에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이 체포됐다”라고 전하며,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朝鮮日報』1977/01/16).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 서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한국언론은 체코슬로바키아당국이 최근 직업을 뺏는 등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나, 77현장 서명자 수는 계속 늘어 300명을 초과했다(『朝鮮日報』1977/01/20b)는 파토츠카의 발표를 인용했다.

체코슬로바키아정부의 탄압상황에서 반체제인사들은 적극적으로 상황을 국외로 알리는 전략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1월 17일 작가 코호트는 서방 공산당과 사회당 지도자들에게 체코슬로바키아의 반체제인사 탄압을 중지토록 개입해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공산당 서기장 구스타프 후사크에게도 서한을 보내 탄압 중지를 요청했다(『朝鮮日報』1977/01/19). 한국언론은 이러한 상황을 77현장의 성격이 투쟁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서방 국가 공산당 및 사회당 지도자들에게 체코슬로바키아의 인권 탄압에 개입해 줄 것을 호소했던 인권운동의 상징 물리나쉬 전 공산당 서기 겸 중앙위원이 국립박물관 곤충학자 직위에서 해임되었다고 18일 전해졌다. 물리나쉬는 77현장에 서명함에 따라서 “본연의 임무를 벗어났기 때문에 해임한다”라는 통지를 받았으며, 카렐대학교 교육과 교수 2명도 해임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東亞日報』1977/01/19a).

1977년 1월 하순부터 체코슬로바키아정부는 본격적인 탄압책의 일환으로 77현장을 전개한 지식인들을 추방할 계획임을 밝혔다. 미국 CIA 보고서에 따르면 체코슬로바키아 언론에서 반체제인사들에 대해 “그들의 자본주의 친구들과 그들에게 빵을 주는 사람들에게로 보내자”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체코슬로바키아 정권이 현장 77에 서명한 반체제인사, 특히 하벨, 코호트, 하예크(Jiří Hájek), 바츨리크를 추방하려 할 수도 있다고 보고했다. 이 항목은 약 300명의 서명자 중 200명이 경찰에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자발적으로 출국하는데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CIA National Intelligence 1977b).

한국언론에서는 1977년 1월 25일 오스트리아 주재 체코슬로바키아대사 코마레크(Karel Komárek)는 오스트리아정부에 대해 체코슬로바키아의 반체제지식인들의 망명처 제공의사를 표명했는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 전 세계에 추방계획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보도했다(『東亞日報』 1977/01/26). 또한 1월 28일에는 77현장 서명자인 전 외교부장관 하예크 등 반체제인사 6명에게 48시간 이내에 오스트리아로 떠나도록 체코슬로바키아정부가 압력을 가했음이 공개됐다. 하지만 반체제인사들은 모두 정부의 조치를 거부했다(『朝鮮日報』 1977/01/29). 1월 말의 시점까지 한국언론은 77현장이 갖는 인권수호에 기초한 운동의 비정치성에도 불구하고, 체코슬로바키아정부가 강압적 방식으로 인륜 보편의 권리를 탄압하는 과정을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탄압의 강화와 각국의 대응

한국언론은 사건의 파장이 점차 확대되어 유럽과 미국, 중국에까지 관련 이슈가 보도되는 내용을 파악하여 국내에 전달하였다. 1977년 1월 말부터 77현장 서명자들에 대한 체코슬로바키아정부 탄압이 가속화되자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는 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고 한국언론은 보도했다. 세계 최대의 비공산노조 단체인 국제자유노조연맹(ICFTU)은 1월 24일 77현장 서명자들에 대한 체코슬로바키아 당국의 처사에 항의하는 국제적 캠페인을 진행했다. 국제자유노조연맹은 소련, 폴란드, 동독의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처우에 항의하며, 특히 77현장에 대한 체코슬로바키아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東亞日報』 1977/01/25). 노르웨이정부는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해 경제적 압력을 가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소련의 간첩네트워크를 적발하고, 소련 외교관을 추방한지 하루만인 29일 체코슬로바키아의 인권탄압 조치에 항의하며, 노르웨이-체코슬로

바키아 무역협정조인식을 취소했다. 노르웨이 외교부대변인은 오슬로에서 거행 될 조인식은 체코슬로바키아 당국이 77현장 서명자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함으로써 취소했다고 발표했다(『京郷新聞』 1977/01/31).

영국정부는 영국 주재 체코슬로바키아대사를 소환하여 인권 및 기본 자유 탄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영국 국무장관 로버츠(Goronwy Roberts)는 체코슬로바키아정부 방침이 1975년 헬싱키 인권선언을 위배하고 있으며 인권이 보호 받고 있지 못함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朝鮮日報』 1977/02/02a). 서독정부는 2월 3일 77현장 서명자들에 대한 당국의 탄압을 공식적으로 비난하고 모든 정치적 수단을 써서 헬싱키선언의 원칙을 실천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京郷新聞』 1977/02/04). 유럽경제공동체(EEC)는 1월 31일 런던 외상회의에서 1) 인권문제, 2) 헬싱키유럽안보협정의 이해 상항을 검토하기 위한 EEC의 공동 대책, 3) 테러행위, 4) 동유럽의 자유를 위한 소련에 대한 압박수단을 논의했다. 다만, EEC 외교장관들은 헬싱키선언문은 동유럽국가에서 이행되어야 하지만, 체코슬로바키아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소련을 공격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했다는 내용도 알려졌다(『朝鮮日報』 1977/02/02a).

77현장에 대한 해외 반응에서 가장 특징적인 반응은 미국과 중국의 반응이었고 한국언론은 이에 주목했다. 우선 미국의 77현장에 대한 성명은 매우 이례적이었는데, 기존에 키신저(Henry Kissinger) 국무장관이 주요 외교정책을 담당했던 닉슨, 포드정부 시기 외국의 인권침해행위를 비난하지 않겠다고 관례와 대조적인 특징을 나타냈던 것이었다. 새 카터행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탄압을 완화하는데 외교정책의 방점을 두었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미국무부는 체코슬로바키아정부에 대해 “헬싱키 선언문에 서명한 모든 국가들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들을 고취, 존중, 준수하기로 서약했다. 우리는 그러한 권리 및 자유의 침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東亞日報』 1977/01/27a).

당시 미국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 문서들을 확인해 보면, 77현장에 대한 미국의 첫 공식 성명에서 언론홍보국장 브라운(Fredrick Brown)은 77현장 서명을 언급하며, “체코슬로바키아의 헌법,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헬싱키최종의정서에 의해 승인되었음에 따라, 최종 법안의 모든 서명자에 대한 권리와 자유의 침해가 어디에서 발생하든 강력히 개탄할 것”을 강조했다(Commission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ongress of the US 1982). 또한 파셀(Dante Fascell) 하원의원은 동유

럽 국가들의 반체제물결에 대해 “자유에 대한 갈증”이라고 부르며, 동유럽 공산주의 당국의 억압적인 대응과 77현장 서명자들의 결의에 주목했다. “유럽 안보협력위원회가 시행한 헬싱키협정의 맥락에서 자유와 인권에 반대하는 탄압은 중대한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77현장 선언문의 전체 번역문을 미국 의회 기록에 남길 것을 요청했다(Fascell 1977). 한국언론은 이러한 미국의 상황과 77현장과 관계된 세계적 분위기를 한국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이례적으로 서유럽과 미국 뿐 아니라 공산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 역시 77현장 지지에 동참했다. 중국은 1977년 1월 26일 체코슬로바키아정부의 기본인권유린에 항의하여 수백 명이 서명한 77현장에 지지의 입장을 나타냈다. 신화통신은 서방 언론을 인용하여, 77현장은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점령 및 지배에 대한 분노와 정치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의 결의를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東亞日報』 1977/01/27b). 1월 29일 보도에는 77현장 운동을 지지한다고 밝힌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서 “체코슬로바키아에 새로운 프라하의 봄이 닥쳐올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인민일보』는 77현장을 언급한 기사에서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라는 영국 시인 셸리(Percy Bysshe Shelley)의 유명한 시구를 인용하며, “지금 체코슬로바키아에는 혹독한 겨울의 찬바람이 휩쓸고 있지만 끝내는 불타바강 언덕에 독립과 자유의 봄이 찾아올 것은 틀림없다”고 마무리했다(『東亞日報』 1977/01/29).

1970년대 말 중소 간 대립은 극에 달한 시점이었고, 소련은 전 세계에서 미국을 반대하는 세력보다 중국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 더욱 강하게 지원하는 시기였다<sup>7)</sup>. 이러한 공산진영 내부 대립의 맥락에 따라 중국의 적극적인 77현장에 대한 지지와 의미 부여가 진행되었다. 신냉전을 목전에 두고 77현장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미국의 동유럽 공산주의에 대한 강경한 입장, 중소 간 대립에 대한 보도는 한국에 있어서도 외교정책 구상을 위한 새로운 흐름을 포착하는 기회일 수 있었다.

서구진영에서의 체코슬로바키아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된 상황에서 한국언론은 이러한 인권탄압 상황이 체코슬로바키아뿐 아니라, 동유럽 전체의 양상이라는 분석을 이어갔다. 언론은 소련과 동유럽의 6개 위성국가들은 1975년 헬싱키에서 “인권과 사상, 양심, 종교, 신조의 자유를 포함하는 기본 자유를 존중한다”는 엄숙히 서명한 35개국 가운데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communism/fe-jn-02012019113639.html](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communism/fe-jn-02012019113639.html), 2022/ 08/11 검색).

고, 많은 지식인들을 구속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폴란드에서도기에레크(Edward Gierek) 정권은 1976년 중순 식량 폭동으로 구속된 사람들을 심하게 고문했고, 이에 따라 바르샤바 지식인들은 정부에 대한 반체제운동을 지속했다. 또한 프라하의 봄이 재현된 체코슬로바키아는 동유럽 전체에서 반체제운동이 가장 활발하다고 한국언론은 평가했다. 언론은 극작가 코흐트가 10여명의 동료들과 함께 프라하 근교 구치소로 연행되어 14시간 동안 심문을 받았다(『朝鮮日報』 1977/02/02b)는 내용을 공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월 들어 체코슬로바키아 내 탄압의 정도와 반체제운동은 더욱 심화되었다. 77현장 대변인인 전 외교부장관 하예크와 파토츠키가 검찰에 소환되었고, 현행법에 위배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京郷新聞』 1977/02/01). 하예크는 뉴욕타임즈와의 회견에서 당국이 인권운동가들의 자택전화를 단절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탄압을 시행했으나, 77현장의 서명자 수는 크게 증가하여 404명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東亞日報』 1977/02/09c). 이에 체코슬로바키아공산당 기관지 루테 프라보는 반체제인사가 현장의 서명자를 208명에서 400명 대로 크게 확대되었다라고 한 발표에 대해 “그들이 정치적으로 순진하든지 음흉하든지 간에 객관적으로 볼 때 맹렬한 반공주의의 행동으로서 유감스러운 역할”을 했다고 비난(『東亞日報』 1977/02/07)한 내용이 한국언론에 구체적으로 보도됐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동독은 77현장 운동과 폴란드에서의 반체제운동이 확대되자 동독인들에 의한 소요예방책으로 35세 미만의 예비군 동원을 포함한 전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다(『東亞日報』 1977/02/03).

이 시기 미국 CIA 보고서에 따르면, 체코슬로바키아 당국이 77현장 지지자들에게 대한 압박을 유지하고 있지만,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기소장 발행을 보류하고 있으며, 기소 보다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비공식적 메시지를 확대하고 있다 분석했다. 사실 당시 77현장 서명자의 수는 증가했지만, 공공 영역에서 77현장의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체코슬로바키아정부는 “다수의 인구가 현장에 반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77현장의 영향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구분되게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부정적 영향력은 심각했다. 외교관계에 있어서 후사크의 정통성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으며, 이탈리아 외교부장관은 프라하에서의 회담을 취소했고, 노르웨이의 장관급 방문도 취소되었다(CIA National Intelligence 1977a). CIA는 체코슬로바키아정부의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국내 대응방식과 위기에 처한 대외 상황을 상세하고 파악하고 있었고, 이러한 분석은 국내적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언론의 분석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1977년 2월 8일 현장에 대한 소련 관련 이슈가 보도되었다. 한국언론은 브레즈네프(Leonid Brezhnev)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에 각각 고위 당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현지의 인권운동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련공산당 대표단은 8일 프라하에 도착했고,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초청으로 정치 및 조직업무 분야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방문했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국언론은 브레즈네프 직속 당서기가 직접 방문한 것으로 보아,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진정되지 않는 77현장 사태에 대한 소련의 우려를 반영할 것이라 분석했다(『東亞日報』 1977/02/09b). 같은 날 하예크와 파토츠키는 연방의회에 서한을 보내 77현장이 불법이라는 체코슬로바키아연방검찰의 판정에 불복함을 밝혔다. 이들은 연방의회가 77현장의 합법성 여부를 판정해주도록 요청함으로써 저항운동이 실질적 법적투쟁이 전개되도록 이끌고 있는 상황이었다(『朝鮮日報』 1977/02/09).

한국언론은 소련 대표단이 의회에 합법성 판단을 요청하는 77현장 인사들과의 면담을 개척한 것이 아니라, 체코슬로바키아정부와 의견 교환을 주요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인권탄압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개선하려 방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파악했다. 특히 소련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인권문제를 조사하기에는 자국의 산적한 인권탄압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미국은 이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이미 1977년 1월 26일 77현장 서명자들 탄압을 지속하는 체코슬로바키아정부 비판성명을 발표한 미국무부는 2월 7일에 미국 주재 소련 타스(TASS)통신 특파원을 추방했고, 소련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탄압 문제를 거론하며 소련을 비판했다(『東亞日報』 1977/02/09a).

이 같은 한국언론의 소련대표단 파견 분석은 미국 CIA 분석보고서의 분석 방향과 유사한 것이었다. 소련의 의도에 대해서 CIA 보고서는 소련언론이 77현장에 대해서 최소한으로만 보도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자들로부터 최소한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묘사했다. 소련은 77현장에 대한 대중의 열광이 분열되고, 체코슬로바키아 공산주의 지도자가 피해를 입지 않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77현장의 논쟁이 지속되는 한 헬싱키협정에 이어 1977년 중순에 예정된 환경·교육의 정부 간 회의를 위한 베오그라드회의에 소련과 다른 동유럽 국가 참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이 지적됐다. 특히 소비에트 선전부는 인권문제를 이용하여 서구가 동서 관계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구를 “데탕트의 적”으로 묘사하고 있었다고 CIA는 기록했다(CIA National Intelligence 1977a).

1977년 2월 9일 한국언론은 미국의 체코슬로바키아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 이유를 분석했다. 카터 대통령은 선거운동 시기에도 “현재 피지배하에 있는



동구에서 자유가 획득되게 하기 위해 미국은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며, 동유럽국가는 독자성을 회복할 때까지 안정지역이라 할 수 없다”라고 발언했다. 카터의 동유럽에 대한 입장은 공화당 정부에서 외교정책을 주도했던 키신저의 정책과 차이가 있었다. 특히 미국무부 소련문제담당보좌관이었던 소넨펠트(Helmut Sonnenfeldt)의 이름을 딴 소넨펠트독트린(Sonnenfeldt Doctrine)은 소련과 동유럽 간 분열을 책동하지 않는 것이 동서관계의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었다. 즉, 동유럽에서 소련의 단일 지배체제를 서구진영이 묵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하지만 카터정부는 기존의 동구 인권탄압의 묵인정책 방향에서 선회하여 소련이 동유럽의 자유와 다원화를 인정해야 동유럽에서 진행될 민족주의 반발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東亞日報』 1977/02/09c). 한국언론은 미국의 동유럽문제 개입은 공산정권 하에서 자유와 권리를 갖지 못한 동유럽인들에 대한 격려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서구의 동정과 지원을 기대하게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1977년 2월 후반 한국언론은 77현장의 여파가 다른 동유럽 공산국가들에 미치고 있음을 포착했다. 루마니아에서 노벨상 수상자 고마(Paul Goma)를 비롯한 루마니아 반체제인사 8명이 1948년 루마니아 공산정권 수립 이래 처음으로 77현장에 영향을 받아 민권현장인 루마니아현장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이 한국언론에 보도됐다. 이 민권현장은 헬싱키안보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에서 인권이 탄압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타국에 의해서가 아닌 “루마니아인들에 의한 루마니아인의 탄압은 슬픈 현실”임을 강조했다. 이에 고마 등 루마니아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8명이 서명한 민권현장은 소련이 폴란드, 동독, 헝가리, 불가리아를 불법 점령한 사례를 비판하면서, 77현장을 통한 반체제운동을 적극 지지했다(『東亞日報』 1977/02/19). 뿐만 아니라 불가리아 반체제운동도 한국언론에 보도되었다. 1977년 1월 중순 불가리아 반체제 지식인 40명이 당국의 심문을 받았고, 14명이 구속되었으며, 77현장 전문이 수도 소피아에 배포되었다. 또한 불가리아 정권에 비판적인 작가들을 초청한 신문들의 편집인 6명이 해고되었다는 내용도 한국에 보도되었다(『東亞日報』 1977/02/22).

1977년 3월에 들어서며 77현장에 대한 한국언론의 보도는 크게 줄었지만, 중요한 현장 관련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신문지면을 차지했는데, 현장의 핵심 인물이었던 파토츠키의 사망이 비중있게 다뤄졌다. 1977년 3월 체코슬로바키아정부가 서명자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는 중이었고, 특히,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77현장 대변인 파토츠키를 소환한 후 귀가시키지 않고 있었다(『東亞日報』 1977/03/04). 결국 파토츠키는 3월 11일 뇌출혈을 일으킨 후 13일 사

망했다는 내용이 다음날인 14일 한국에 보도됐다. 당시 파토츠키는 3월 4일 11시간 경찰 신문을 받은 후 10일 병원에 입원했으며 몸이 마비되고, 의식을 잃어가는 상황이었다(『東亞日報』 1977/03/14).

파토츠키 사망 후 1977년 3월 19일 르몽드지는 “얀 파토츠키, 저항하는 철학자”라는 기사를 실었고, “현상학 철학자인 그가 경찰 심문으로 기진맥진해지고, 병상에서까지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문자 그대로 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바로 그가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에게 가해진 끝없는 압력이 바로, 한 민족의 극단적 굴복 상태에선 주관성에 대한 철학적 변론이야말로 압제자에 대항하는 유일한 수단임을 증명한다”라고 했다(바츨라프 하벨 1992, 54). 파토츠키의 작품은 인권옹호에 대한 도덕적, 철학적, 역사적 정당성을 제공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 전체주의체제의 독재적 관행에 반대했다. 또한 이데올로기적 해석으로 정부를 운용하려하는 공산주의자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마틀라는 “그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이 싸움에 목숨을 바쳤으며, 현장 77과 관련된 비밀경찰의 심문 결과로 사망했다”고 기록했다(Matula 2011, 295).

1977년 4월 이후에도 한국에서 77현장의 영향과 이에 대한 공산정권의 지속적인 탄압과정 보도되었다. 4월 9일 고위장성으로서 77현장에 서명한 사헤르(Vilem Sacher) 중장이 후사크 공산당 서기장의 명령에 따라 사병으로 강등되고 모든 훈장까지 박탈당했으며,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東亞日報』 1977/ 04/09). 이후 1979년 10월에도 한국언론은 핵심인물 코호트가 오스트리아에 머문 사이 시민권이 박탈되며 귀국할 수 없게 된 사정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코호트는 외국여행 중 시민권을 박탈당한 최초의 체코슬로바키아인이었다(『京鄉新聞』 1979/10/20). 1981년 12월에는 77현장 그룹이 후사크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현장 관련 정치범 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이 한국에 보도됐다(『京鄉新聞』 1981/12/07).

또한 1977년 초 한국언론에서도 비중있게 보도한 77현장의 국제적 관심은 서구지역에 있어서 동유럽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 뿐 아니라, 체코슬로바키아의 반체제인사들의 대외정책 방향을 전환하는데도 영향을 미쳤다. 반체제인사들은 1970년대까지 대외전략을 활용하는 방법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반체제인사들은 활동을 지지하는 해외 파트너들을 발견했고, 서독,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운동가들과 교류했고, 정권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제 평화회의에 참석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라디슬라프 차바다·샤르카 바이소바 2013, 219).

1980년대 말 국제환경의 영향과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으로 인해 77헌장은 점차 정치적 성격을 띠어갔으며 기존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고 근본적인 정치와 경제의 개혁을 요구했다. 이처럼 1980년대 말 77헌장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비판 조직에서 점차 공산정권에 대한 포괄적 반대를 표방하는 단체로 선회했다. 이것은 1989년 말 시민포럼으로 전환되었고, 시민포럼은 시민의 자발적 지지에 기반한 포괄적 반공주의 단체로 공산정권 퇴출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김신규 2002, 13). 한국의 보도 역시 1989년까지 이어지며 12월 “개혁 결실 거두는 프라하의 가을”이라는 기사에서 벨벳혁명은 “77헌장 그룹의 극소수 지식인들이 꾸준히 벌여온 반체제운동이 동유럽의 민주화 도미노현상과 함께 표면화”되었고, “77헌장 제1 서명자인 바츨라프 하벨이 새 대통령에 선출될 것”이라고 기사화했다(『東亞日報』 1989/12/11). 한국언론은 77헌장 발표 시기의 시급한 상황 보도 이후 10여 년 기간 동안 체코슬로바키아의 자유화 과정을 국내에 세밀하게 소개했다.

#### IV. 한국의 원인분석과 북한과의 관련 보도 비교

77헌장 발표 후 한국언론에서는 동유럽에서의 자유화 운동의 원인에 대한 본격적 분석을 시도했다. 초기 언론은 자유화 움직임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뿐만 아니라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공산권에 전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포착한다. 『東亞日報』 1월 19일 기사에서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요구하는 반체제 움직임이 소련과 동유럽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소련에서는 1976년 12월 유태인문제 심포지엄 개최 전 주최자들이 체포되었고, 정치범수용소의 실태가 공개되며 대외적 이미지가 하락하는 상태였음이 지적됐다. 또한 폴란드는 1976년 6월 식료품가격 인상 반대 폭동사건으로 수 천 명의 노동자들이 체포됐고, 20여명의 지식인들로 조직된 노동자보호위원회는 회원이 1만 여명으로 늘어난 상태였다. 동독에서는 서독에서 공연한 동독의 반체제시인이자 가수인 비에르만(Wolf Biermann)의 시민권이 박탈당하자 저항이 확대됐고, 1975년부터 10만여명의 동독인들이 서독이주를 신청한 상태였다(『東亞日報』 1977/01/19b). 이렇듯 한국언론은 자유화의 흐름은 체코슬로바키아뿐이 아닌 동유럽국가들이 마주하고 있는 새로운 현실임을 인지했다.

또한 한국언론은 77헌장이 나타난 동유럽 지역의 배경 분석에 이어 문제해결

방법도 고찰했다. 인간의 기본적 자유의 존중, 사람과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를 다짐한 헬싱키회의의 약속과 정신이 동유럽에서 구현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소련과 동유럽정부가 국가체제에 중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 77현장 관계자들에 대해 최대한의 완화정책을 펼칠 것을 제시했다. 둘째, 동서 간 데탕트가 진행된 것과 같이 서구는 동유럽 정치체제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압박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만 할 것임을 강조했다(『東亞日報』 1977/01/19b).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매우 모호한 것으로서 동유럽 자유화 운동이 반체제를 기조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또한 소련과 동유럽을 압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압박수단”이 과연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이후 한층 더 자유화 운동의 본질을 분석하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1977년 1월 20일 언론에서는 첫째, “프롤레타리아 노동계급의 독재의 모국”인 소련과 같은 형태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을 추종한 국가들은 이제 피지배국으로 전락한 상황이었다. 동유럽 지식인들은 공산당 독재 하에서 억압받는 노동자들의 사정을 대변하고 있으며, 민주적 자유가 없는 노동계급의 처지가 세계에 공개되었다고 보았다. 둘째, 77현장의 요구나 배후 이념은 과격한 것이 아닌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상식으로 파악했다. 공산주의가 진보적 사상이라 강조하던 나라들에서 인권과 자유의 욕구는 정치권력에 진압당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민주주의 가치가 갖는 강인성을 실증하고 있는 것이었다. 셋째, 한국언론은 소련권 내 자유화 운동이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구 공산당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짚었다. 서유럽의 공산당은 이미 당 이념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포기하고 과학적 사회주의로 전환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권 내 반체제운동에 대한 서유럽 공산당의 지원은 “기괴한 역사적 현실”이며, “공산주의운동의 다원화” 보여주는 것이라 분석했다(『朝鮮日報』 1977/ 01/20a).

언론 분석의 주안점은 동유럽 위성국가들의 피지배국 처지로의 전락과 이 상황에서 지식인들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저항하는 공산당 내 이완과 분화를 짚어내고 있었다. 특히, 77현장의 흐름을 동유럽뿐 아니라 공산주의 역사의 전환점으로 보는 특징도 나타났다. 1977년 2월 언론은 위의 분석과 같은 맥락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동유럽에서 진행되는 자유화운동을 전체 공산주의 내에서 진행되는 이완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동유럽에서는 10년 마다 “세찬 자유화의 바람”이 불어왔는데, 1956년 헝가리혁명 그리고 1968년 프라하의 봄은 1978년이 되면 1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고

정훈(高貞勳)은 프라하의 봄의 의미와 77현장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1953년 6월 동독에서, 1956년 2월 크레믈린 제20차 소련공산당대회에서 그리고 같은 해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공산주의는 좌절을 거듭했고, 스탈리니즘은 일인독재와 개인숭배를 합리화하는 타락한 편주의였다가 것이 분명하다. 프라하의 봄은 공산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뜻을 부여한 사건의 하나였는데, 하나의 공산주의 사회가 다른 하나의 공산주의 사회를 총칼로 무찔러 죽이는 것을 수 없는 중대한 모순이 나타난 것이다. 프라하의 봄을 꽃피운 1968년의 체코슬로바키아의 역사는 동체코 일파가 얼마나 충직한 공산주의자들이었는가를 웅변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소련의 비스탈린화 정책과 수정주의의 한계가 어떤 것이며 소련의 외교정책의 기초가 어떤 것인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프라하의 봄이라고 하겠거니와 카터의 도덕률이 77현장의 서명자들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세계의 관심은 여기에 쏠려야 할 것이다(『朝鮮日報』 1977/02/06).

한국언론은 77현장이 단순히 헬싱키최종의정서의 미이행에 따라 발생한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동유럽과 소련에서 진행된 스탈린주의, 전체주의가 갖는 한계가 1953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내부모순에 따른 균열현상이 77현장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1977년 언론의 분석을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 이전인 1970년대 중반부터 ‘좌파지성의 고향’이던 파리에서 공산주의가 무너져 내렸다는 버먼의 평가(김명섭 2015, 86)와 연결할 때, 전체 공산진영의 한계가 드러난 냉전의 새로운 양상이 분명해진다.

1977년 초 한국언론의 77현장에 대한 보도는 사건의 배경과 현장 서명자들의 의도, 이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탄압과정의 구체적 상황, 세계 각국의 반응을 최대한 소개하고 있었고, 특히 공산정권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1970년대 박정희정권은 유신체제의 성립을 전후하여 언론통제를 강화했다. 한국언론이 77현장의 의미를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었던 주요 배경 중 하나는 77현장이 공산독재에 항거하는 반체제운동이라는 측면도 강하게 작동했다. 그러나 언론보도는 반공을 넘어서서 인간의 존엄 자체를 옹호하는 측면도 엿보인다.

“고백”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프라하의 음산한 겨울을 연상시키는 이 영화는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체제가 한 인간을 너무도 어이없게 암흑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었다. … 어둡침침한 지하실, 스산한 분위기, 끝도 없이 강요

하는 불면의 고문, 입술이 찢어지는 목마름, 똑같은 질문의 반복, 조작되는 증언들 ... 그것은 어쩌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후의 극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최근 프라하에서는 다시금 음산한 겨울이 ... 2백40여명의 지식인이 참가한 이 선언은 1968년 프라하의 봄 이후, 최대의 반체제선언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언문 가운데는 “많은 시민이나 청년들이 공식적인 견해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차별’을 고발하고 있다. 그들은 직업을 빼앗기고 교육을 받을 기회에서 제외되며, 자신을 변호하는 것조차 용납되어있지 않다. 인간의 존엄이 짓밟혀 도덕적인 파멸 속에서 고통거리는 그들, 지식인의 절규는 눈물겹기까지 하다. “인간의 권리를 지키는 책임은 단순히 국가의 의무일 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의무다. 우리는 그 공동책임의 의식, 그에 대한 시민적 참가의 의사, 공통의 요구에 따라 이 77헌장을 발표한다.” 선언의 마지막 구절이다. 체코의 이와 같은 봄바람은 이미 폴란드에서도 일고 있다. 그러나 프라하에서도, 바르샤바에서도 ‘봄’의 아지랑이는 아직 멀기만 하다 ... ‘생명의 봄’을 갈망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소망, 그와 같은 싹을 짓밟으려는 검은 그림자... 프라하의 봄은 아직은 환상의 계절인 것만 같다(『中央日報』 1977/01/11).

유신체제는 안보에 관한 중대 사항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기사에 대해서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신 헌법에 이은 긴급 조치 발동 등 강력한 법적 통제체제를 구축한 이후 유신체제는 기자들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제재도 더욱 강화하여 자유로운 취재 보도 활동을 극도로 위축시켰다. 1974년 3월에는 동아일보사 노조, 12월에는 한국일보사 노조가 결성되었다. 1974년 10월 『東亞日報』에서는 외부 간섭 배제, 기관원 출입 금지, 불법 연행 거부 등을 요구하는 ‘자유언론실천선언’이 있었지만, 언론사 사주들이 광고 통제에 굴복하면서 자유언론실천운동은 1975년 3월 결국 좌절된다(국사편찬위원회 2007). 위의 사실은 공산주의체제의 전체주의 속성을 고발함과 동시에 엄혹한 한국사회의 분위기를 피력하는 것처럼 읽히기도 한다.

그렇다면 77헌장이 공개된 시기 북한에서의 77헌장에 대한 보도내용과 인식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었을까? 체코슬로바키아정부에서 서명자들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고, 국제적 반응이 거세지던 1월 하순 북한에서는 1977년 들어 처음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다. 1월 21일 『로동신문』은 체코슬로바키아 농업신문 제므네델스케 노비니(Zemědělské Noviny)가 최근호에서 “조선의 800만톤”이라는 기사를 통해 북한의 농업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을 강조한다. 1976년 북한 기후가 불안정했음에도 조선노동당의 농업정책에 따라 800만톤 이상의 알곡을 생산한 ‘거대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기사였다(『로동신문』 1977/01/21).

또한 1977년 1월 31일에는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제건설이 주도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철 생산량이 1977년에 2.7% 증가될 계획으로 건설사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고, 이는 1975년까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영향으로서 철도의 전기화, 건재공장의 확대가 가능할 것임을 확신했다(『로동신문』 1977/01/31). 이후에도 10월 11일에는 체코슬로바키아 주간지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자연개조 5대방침”을 소개되었고, 알곡생산량을 1,000만 톤으로 확대하는 조치했다는 내용 『로동신문』에 보도됐다(『로동신문』 1977/10/11). 10월 25일에는 김일성이 체코슬로바키아대통령 후사크의 부인 사망을 추도하는 조전을 보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하지만 이러한 신문내용은 사실 당시 체코슬로바키아, 동유럽 그리고 소련의 상황이나 전세계적 이슈와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로동신문』의 기사에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보도된 북한의 경제성장에만 초점을 두며, 77헌장과 동유럽 상황에 대한 보도가 완전히 누락되었다. 이는 체코슬로바키아정부 주도로 진행되며, 체코슬로바키아 뿐 아니라 전체 동유럽을 뒤흔들었던 1968년 프라하의 봄 시기와는 전혀 다른 보도 태도였다. 『로동신문』에서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해 보도한 내용은 1968년 32건이었고, 그중에서도 프라하의 봄 사건을 “체코슬로벤스꼬 사변”이라 칭하며 깊은 관심을 보도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1977년 『로동신문』에서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기사는 5건에 지나지 않았고, 그마저도 77헌장에 대한 기사는 전무했다.

프라하의 봄에 대한 『로동신문』의 기사<sup>8)</sup>는 체코슬로바키아정부가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현상이 표면화되었고 국가 전체를 흔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바츨리크를 중심으로 작성된 ‘2천단어’ 성명과 작성자들을 비판하며, 이 성명은 “제국주의자들의 조종하에 있는 이 나라의 반혁명분자들이 체스꼬슬로벤스꼬 로동계급과 인민의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 체도를 뒤집어엎고, 착취와 억압이 지배하는 암흑의 사회-자본주의 사회를 복귀시키려는 저들의 흉악한 투쟁목표를 정식화한 반혁명적행동강령”이라고 강조했다. 둠체크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동맹관계를 약화시키면서 서방제국주의 특히 미제와 서독복수주의자들에게 접근”했고, “서독국경에 설치한 지뢰와 철조망을 해체”했다고 비판했다.

8) 기사의 초반부에서는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는 소위 ‘자유화’, ‘민주화’의 바람”이 거세지며, 1968년 1월 공산당의 개선안이 진행되었고, 3월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출판법 개정, 작가동맹과 협력, 3월 10일 프라하대학생 3,000여명이 “초대 대통령인 반동분자 마싸리끄의 아들로써 해방후 의무상을 하면서 반혁명분자 노릇을 하던 안 마사리끄의 묘지”에서 추도식을 거행하고, “그와 같은 사람이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로동신문』 1968/08/22)표명했던 내용을 비판적으로 소개됐다.

결국 8월 21일 소련, 불가리아, 헝가리, 동독, 폴란드 군대는 체코슬로바키아 활동가들의 무력원조 요청으로 “사회주의 침몰을 수호”하고, “구라파 사회주의 나라들의 안전을 보장할 목적”으로 체코슬로바키아 영토에 들어갔음이 보도됐다(『로동신문』 1968/08/22).<sup>9)</sup> 북한은 프라하의 봄의 개혁 방법, 구호, 목표, 전개 과정을 체제유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과도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1977년 체코슬로바키아 개혁이슈는 북한 내에서 완전하게 차단되었다.

1968년 프라하의 봄과 1977년 77현장 시기의 북한 상황을 살펴보면,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은 1950년대 고속 성장을 기록했고, 1956~69년 사이 노동과 자본의 높은 투입증가율에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플러스를 보여 연평균 7.0%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1970년대 2%의 저성장을 나타냈고, 특히, 1977년은 극도의 저성장을 나타내는 시기였다(조태형·김민정 2020, 30-37). 1977년 『로동신문』은 체코슬로바키아에 소개되는 북한의 경제안정을 홍보성으로 보도했지만, 이는 당시 북한의 경제 상태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1974년 이후 북한경제는 쇠퇴기에 접어들었고, 1977년 북한의 대서방 교역은 1974년의 절반이 못 미치는 3억 6,300만 달러였으며, 1977년 누적 외채도 21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사이로 추정되었다(김계동 2002, 146). 1970년대 후반부터 생산요소의 대량투입이 한계에 도달했고, 외연적 성장은 한계에 직면한 시기였다(조태형·김민정 2020, 37)

정치적 측면에서 1960년대 후반은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확립하고, 남조선혁명노선에 의한 통일구상이 채택되었으며(1966년), 김일성 유일사상체제가 확립

9) 1968년 8월 23일에도 『로동신문』은 연이어서 체코슬로바키아 사태를 다루고 있었다. 전날과 같이 사태에 대한 정밀한 전개과정과 비판에 이어서 사태발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었다. 특히 체코슬로바키아의 수정주의 정책의 포기가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노동계급과 대중에 지속적으로 의식과 혁명사상을 교양해야만 제국주의의 사상공세와 부르주아사상의 침습을 막을 수 있지만 체코슬로바키아는 사상사업을 도외시한 결과 현 사태를 마주했다는 분석이었다. 이에 따라 김일성이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될수록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약화시킬 것이 아니라 계속 강화하여야 하며 계급투쟁도 계속하여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을 보도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민주화’, ‘자유화’라는 구호 밑에는 프로레타리아 독재기관에 대한 악의에 찬 중상공격이며, 무정부적 상태를 부활시키려는 책동이 있으며, 이는 부르주아적 자유, 부르주아적 민주주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님을 비판했다. 이에 반해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소수착취계급과 인민의 원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독재를 실시하며, 노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에게는 최대한의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최고형태의 민주주의이다. 자유 역시 혁명을 초월한 자유란 있을 수 없다. 당의 령도를 거부하고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거부하는 ‘자유’는 근로대중을 억압착취하고 소수착취계급만이 잘 살기 위한 부르주아지의 자유이다.”(『로동신문』 1968/08/23).



(1967년)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국가 추진 방향의 정비 후 1968년 1월 청와대 습격사건과 푸에블로나포사건 등 한국에 대한 도발이 진행되었다(와다 하루키 2014, 155-170). 따라서 경제적인 자신감과 국가 사상체계 정비를 갖춘 평양정부에게 있어서 프라하의 봄 사태에 대한 구체적 보도는 동유럽 공산국가들과 체코슬로바키아 전체주의체제의 한계성을 지적하며, 오히려 북한 체제기반의 우월성 강조와 국가체계를 다지는 기회로 삼고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 경제상황이 급박한 위기로 치닫고 있던 북한으로서 자유화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동유럽 공산정권의 이완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의 보도 형태 역시 반공에 입각한 논조의 경직성도 확인할 수 있지만, 북한의 77현장 보도의 전무함과 비교했을 때 동유럽 상황의 다층적 모습이 국내에 소개되며, 공산독재의 한계 지적 뿐 아니라 엄혹한 유신체제에서 자유의 소중함을 환기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 V. 결 론

77현장은 정치적 강령이 없었고, 정권의 정책에 대한 반대를 의도하지 않는다는 목표를 강조하며, 비정치성과 인권을 향한 동기에 방점을 둔 체코슬로바키아 반체제운동이었다. 이러한 77현장이 1977년 1월 공개되자 한국언론은 1월 8일부터 77현장이 갖는 비정치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알려진 하벨, 바츨리크 등 관련 인사들을 체코슬로바키아정부가 구속하고 소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과거 체코슬로바키아정부가 반체제운동에 대해 이념적 방식으로 대응했던 것과 달리 강압적 방식으로 인류 보편의 권리를 탄압하는 과정을 한국언론은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보도했다.

1977년 1월 말부터 체코슬로바키아정부에 의한 탄압이 가속화되자 한국언론은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의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 조치뿐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반응에 주목했다. 중국은 중소 간 대립이 극으로 치닫는 시점에서 77현장을 지지하고, “새로운 프라하의 봄”이라는 평가를 했다. 미국 역시 “동유럽 인권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기조를 깨고, 체코슬로바키아정부가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했음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국언론은 2월에 들어서자 77현장의 파장이 동유럽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고 보았으며, 루마니아, 불가리아 상황을 보도했다. 이후에도 한국은 체코슬로바키아 당국의 탄압에 의한 파

토츠키의 사망과 현장 관계 인사의 시민권 박탈 등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했고, 냉전체제 붕괴를 이끈 1989년 벨벳혁명까지 77현장에서 이어져온 체코 슬로바키아의 자유화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77현장 발생 배경에 대해서 한국언론은 시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저항하는 공산세력 내부의 갈등을 원인으로 짚었다. 77현장이 단순히 헬싱키최종의정서의 미이행에 따라 발생한 사건으로 보는 관점에서 보다 나아가, 1950년대 스탈린 전체주의가 갖는 한계가 공산주의의 균열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한국에서의 77현장 관련 보도가 심도 있고, 신속하게 진행된 반면, 북한의 관련 보도는 전무했다. 『로동신문』이 1968년 프라하의 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도했던 것과 달리, 1970년대 후반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시기에 결속됐던 공산체제의 이완현상을 국내에 전달하는 것은 무리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체코슬로바키아 대내외적 긴장, 입장을 달리하는 각국의 반체제그룹 지지선언, 북한의 무보도 대응 등 복잡한 정치적 관계를 함축한 77현장 사례는 자유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는 한반도에서 분명한 현재적 의미를 갖는다.

## 참고문헌

### 1차·준1차 자료

#### 국문 자료

#### 대한민국 신문

- “체코지식인 민주문화운동 지하선언문 「77년 현장」 마련.” 『東亞日報』 1977/01/08.
- “체코 「반체제」 민주화 투쟁.” 『朝鮮日報』 1977/01/09.
- “체코의 「77년 현장」, 정부서 공격개시.” 『東亞日報』 1977/01/10.
- “「체코」의 77현장.” 『中央日報』 1977/01/11.
- “체코지식인 12명을 소환.” 『東亞日報』 1977/01/12.
- “「77현장 주동」 체포.” 『朝鮮日報』 1977/01/16.
- “체코 현장서명자, 또 2명 체포.” 『東亞日報』 1977/01/17.
- “체코 자유화 탄압 가중.” 『東亞日報』 1977/01/19a.
- “과고(波高) 거센 동구 자유화 운동.” 『東亞日報』 1977/01/19b.
- “탄압 중지토록 호소, 서구공산당 개입도.” 『朝鮮日報』 1977/01/19.
- “소련-동구의 사상적 동요.” 『朝鮮日報』 1977/01/20a.
- “77현장서명 3백 명 넘어.” 『朝鮮日報』 1977/01/20b.
- “체코 탄압 규탄운동, 국제노조련(國際勞組聯).” 『東亞日報』 1977/01/25.
- “체코 반체제집단 추방할 계획.” 『東亞日報』 1977/01/26.
- “특정국 지칭 첫 공식성명, 미 체코 인권탄압을 비난.” 『東亞日報』 1977/01/27a.
- “중공 「77현장」 지지.” 『東亞日報』 1977/01/27b.
- “인민일보 예언 ‘새 프라하의 봄’.” 『東亞日報』 1977/01/29.
- “「77현장」 서명자 출국 거부.” 『朝鮮日報』 1977/01/29.
- “노르웨이, 인권탄압 항의 대체코 무협조인 취소.” 『京鄉新聞』 1977/01/31.
- “현장 서명자 형사 제재 위협, 체코 「자유화」 탄압 계속.” 『京鄉新聞』 1977/02/01.
- “구공시(歐共市) 동구인권 문제 논의.” 『朝鮮日報』 1977/02/02a.
- “「프라하의 봄」은 또 오는가.” 『朝鮮日報』 1977/02/02b.
- “77현장의 요지.” 『朝鮮日報』 1977/02/02c.
- “독 전군에 비상령경계.” 『東亞日報』 1977/02/03.

- “서독도 77헌장지지.” 『京鄉新聞』 1977/02/04
-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朝鮮日報』 1977/02/06.
- “체코 인권보복 재개.” 『東亞日報』 1977/02/07.
- “미국의 대소·동구 인권공세.” 『東亞日報』 1977/02/09a.
- “소, 동구 인권 조사.” 『東亞日報』 1977/02/09b.
- “77헌장 서명자 404명으로.” 『東亞日報』 1977/02/09c.
- “77헌장 법적투쟁 전개.” 『朝鮮日報』 1977/02/09.
- “고마 등 반체제인사 8명, 루마니아헌장 발표.” 『東亞日報』 1977/02/19.
- “불가리아 인권탄압 심문 40명·구속 14명.” 『東亞日報』 1977/02/22.
- “체코 하예크 자택연금, 철학교수도 감금.” 『東亞日報』 1977/03/04.
- “77헌장」 운동 대변인 심문 받은 뒤 사망.” 『東亞日報』 1977/03/14.
- “중장을 사병으로 강등.” 『東亞日報』 1977/04/09.
- “탄압받는 체코작가 파벨 코후트.” 『京鄉新聞』 1979/10/20.
- “체코 77헌장그룹 "성탄절 기해 정치범 사면을.” 『京鄉新聞』 1981/12/07.
- “개혁」 결실 거두는 「프라하의 가을.” 『東亞日報』 1989/12/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문

- “최근 체코슬로벤스꼬사태에 대하여.” 『로동신문』 1968/08/22.
- “체코슬로벤스꼬사태의 력사.” 『로동신문』 1968/08/23.
- “체코슬로벤스꼬신문이 우리 나라 농업성과를 강조.” 『로동신문』 1977/01/21.
- “체코슬로벤스꼬신문의 경제건설성과.” 『로동신문』 1977/01/31.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연개조 5대방침을 체코슬로벤스꼬 주간지가 소개.” 『로동신문』 1977/10/11.
- 『로동신문』 1977/10/25.

#### 영문 자료

- CIA National Intelligence. 1977a. “Czechoslovakia: Pressure on Charter 77 Dissidents. February 8, 1977.” Carter Presidential Library. <https://nsarchive2.gwu.edu/NSAEBB/NSAEBB213/usdocs/USDoc2.pdf> (2022/05/20 검색).
- CIA National Intelligence. 1977b. “Daily. January 28, 1977.” Carter Presidential Library. <https://nsarchive2.gwu.edu/NSAEBB/NSAEBB213/>

usdocs/USDoc1.pdf (2022/05/09 검색).

Commission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ongress of the US. 1982. “Human Rights in Czechoslovakia: The Documents of Charter ’77, 1977-1982.” <https://www.csce.gov/sites/helsinkicommission.house.gov/files/Human%20Rights%20in%20Czechoslovakia%20The%20Documents%20of%20Charter%20%2777.pdf> (2022/06/15 검색).

Department of Investigation, State Security Forces (StB). 1977. “Decision, January 11, 1977.” The National Security Archive.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https://nsarchive2.gwu.edu/NSAEBB/NSAEBB213/index.htm> (2022/06/05 검색).

Depart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Corps, City of Prague. 1977. “Decision, January 6, 1977.” The National Security Archive,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https://nsarchive2.gwu.edu/NSAEBB/NSAEBB213/index.htm> (2022/06/24 검색).

Fascell, Dante. 1977. “The Helsinki Spark. House of Representatives, January 26, 1977.” The National Security Archive,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https://nsarchive2.gwu.edu/NSAEBB/NSAEBB213/index.htm> (2022/06/18 검색).

Prečan, Vilém. 1978. *The Right to Know, the Right to Act: Documents of Helsinki Dissent from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edited by The Staff of the Commission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Washington, D.C.

The National Security Archive. 2007. “Charter 77 After 30 Years Documenting the Landmark Human Rights Declaration” <https://nsarchive2.gwu.edu/NSAEBB/NSAEBB213/index.htm>. (2022/07/01 검색).

## 2차 자료

### 국문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2007. 『광고 시대를 읽다 한국문화사 20권』. 서울: 동아출판.

그렉 브라진스키 저, 나종남 역. 2011. 『대한민국 만들기, 1945-1987: 경제 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미국』. 서울: 책과함께.

김계동. 2002. 『북한의 외교정책』. 서울: 백산서당.

- 김명섭. 2015. “한국의 국제적 탄생과 성장.” 남성욱 외 편. 『한국의 외교안보와 통일 70년』.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57-103.
- 김신규. 2002. “체코의 민주적 전 통과 유산 - '77헌장'과 '시민포럼'의 역할과 영향을 중심으로.” 『동유럽발칸연구』 11(1), 165-188.
- \_\_\_\_\_. 2020. “체코슬로바키아 공산정권의 등장과 몰락 요인 분석.”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57, 113-141.
- 김정현, 김래영, 이상경, 임지봉. 2017. 『통일법제연구 17-19-4: 체제전환국가의 국가조직 및 관련법제 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 라디슬라프 차바다, 샤희카 바이소바 저, 김신규 역. 2013. 『체코와 국제정치』.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바츨라프 하벨 저, 김정숙, 임혜정 역. 1992. 『대통령의 꿈』. 서울: 들꽃세상.
- 바츨라프 하벨 저, 이택광 역. 2016. 『불가능한 예술』.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 안드레이 란코프. 2019. “중소 갈등과 분쟁.” 『자유아시아방송』 (2월 12일).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communism/fe-jn-02012019113639.html](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communism/fe-jn-02012019113639.html) (2022/08/11 검색).
- 와다 하루끼 저, 남기정 역. 2014. 『와다 하루끼의 북한 현대사』. 과주: 창비.
- 조태형, 김민정. 2020.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 추정: 1956~1989년.” 『BOK경제연구』 17, 1-61.

## 영문 자료

- Čornej, Petr & Jiří Pokorný. 2015. *A Brief History of the Czech Lands*. Nakladatel: Práh.
- Judge, Edward H. & John W. Langdon. 2018. *The Cold War through documents : a global history*. Lanham; Boulder; New York; London: Rowman & Littlefield.
- Matula, Jozef. 2011. “Path to Morality: Two Decades after the Fall of Communism.” *East European Studies* 28, 287-308.
- Paměť Národa. 2008. “Ladislav Hejránek.” [https://www.pametnaroda.cz/cs/hejranek-ladislav-1927? locale=ru\\_RU](https://www.pametnaroda.cz/cs/hejranek-ladislav-1927? locale=ru_RU) (2022/07/15 검색).
- Pesik, Richard. 1998. “Charter 77, Its Struggle, Problems and Accomplishments.” MA Thesis, University of Manitoba Winnipeg.
- Prečan, Vilém. 1990. *Charta 77: Od Morální k Demokratické Revoluci*.

Praha: Středisko Nezávislé Literatury.

Tamkin, Emily. 2017. “In Charter 77, Czech Dissidents Charted New Territory.” *Foreign Policy*, <https://foreignpolicy.com/2017/02/03/in-charter-77-czech-dissidents-charted-new-territory/> (2022/05/03 검색).

“Zdenek Mlynar, 66, a Reformer For Czech Dissident Movements.” *The New York Times*, 20 April 1997.

Abstract

## **Korean Perceptions of Czechoslovakia's Charta 77: Focusing on Korean Media Reports**

Joonseok Yang ■ Kookmin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Czechoslovakia's Charta 77 and Korean perceptions of the Czechoslovak liberalization movement in 1977 based on media materials. Charta 77, published on January 1977, was a Czechoslovak dissident movement that emphasized non-political purposes and human rights motives. The media of the Republic of Korea(ROK) quickly and concretely reported on the suppression of the human rights of those involved in Charta 77 by the Czechoslovak government,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reactions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human rights issues in Eastern Europ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upported Charta 77 and called it a "new Prague Spring." The United States also broke with the principle of nonintervention in human rights issues in Eastern Europe and strongly criticized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there. The media of the ROK continued to report on the trend toward liberalization from Charta 77 until the Velvet Revolution in 1989. In particular, in analyzing the causes of Charta 77, ROK media cited Czech intellectuals' longing for democracy and internal conflicts within the communist forces that resisted the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While multi-layered reports on Charter 77 in the ROK progressed quickl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reported in detail on the 1968 Prague Spring, but there were no reports in DPRK on Charta 77 during the worsening economic crisis of the late 1970s.

Key Words: Korean - European Relations, Charta 77, Czechoslovakia, Eastern Europe, Communism

□ 논문접수일: 2022년 7월 20일, 심사완료일: 2022년 8월 20일, 게재확정일: 2022년 8월 29일